

광주 의원들 지역현안 토론 정례화

광주은행 분리매각 등 사안별 해법 모색

전남 국회의원, 시·도와 공조 구축 절실

민주통합당 광주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안별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남지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는 물론 광주시, 전남도 등과의 공고한 협조 체계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4일 장병완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지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6명은 서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효율적인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참여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은 지역 현안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사안별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달에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온 ‘광주은행 분리 매각’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엔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금융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 광주은행 분리매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광주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을 각 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들도 당원 중심이 아닌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 폭을 넓히기로 했다.

광주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민심 속에 살아 숨 쉬는 광주시당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당 예결위원회에는 박혜자 의원이, 윤리위원회에는 임내현 의원이 선임됐다.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 당원자격사위원회 위원장도 추후 논의를 거쳐 현역 국회의원들이 맡기로 했다. 또한, ‘2030 세대’와의 소통과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반과 심화반 등 2개 반으로 나눠 ‘정치학교’를 개설하기로 했다. 광주시당의 ‘정치학교’는 교과 과정과 강연진 확장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정치권의 공조는 물론 자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한 분기별로, 광주와 전남지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통합진보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자체와의 협력 체제도 보다 공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마련 등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 자자체와의 공조 등이 절실히는 지적이다.

김동철 의원은 “19대 국회가 정상 개원하고 상임위가 정해진 이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며 “19대 국회에 진입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잘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도 못여는 19대 국회

여야 대치…오늘 첫 본회의도 불투명

민생외면 비난 속 공전 장기화 가능성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이견을 풀지 못하면서 5월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불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9대 국회가 출발부터 빠져나온다.

국회 사무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일정을 지난 1일 공고했다.

새누리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먼저 열어 19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자고 거듭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타결 전에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5일 본회의장에 입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할 가능성이 작은 대체선 이전이 크다. 새누리당은 애초 선진당 뜻이었던 복지위원회와

함께 윤리특위위원회를 양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발 속에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회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여당 뜻 외통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와 별개로 여당 뜻 정무위·국토위·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줘야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유럽발(發) 경제위기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험받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과거처럼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을 저버린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 읊인’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관심은 대선과 전당대회 등 당 안팎의 선거에만 쏟아 있는 모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수경 막말 파문 확산

대국민 사과 불구 탈북자·하태경 반발

박지원 “당 차원 조치없다” 서둘러 진화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하태경 막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임 의원과 민주당에 사과는 물론 당의 책임 있는 조치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한 가운데 임 의원의 처리를 놓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문제를 불거진 뒤 트위터를 통해 해명했지만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4일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임 의원은 “저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든 논란은 저의 불찰로 인한 것이라고 제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 의원의 변명자 발언은 탈북자 강제복송을 주장하는 북한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면서 “임 의원의 반인권적, 반자유민주주의적 인식이 놀라울 때”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이 ‘변절자’라고

표현한 하태경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독재와 반인권 참상을 목격한 뒤로 북한인권운동에 헌신해 왔다”면서 “지금이 순간까지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 참상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내 종북세력이 말로 역사와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자단체들도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과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 모여 임 의원에게 “당신의 조국 북한으로 가라”며 국회의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임 의원의 발언을 개인 차원의 ‘발설’로 규정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임 의원의 진실 어린 사과와 반성, 해명을 믿는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임 의원의 발언에 신뢰를 보낸다”면서 “당 차원의 조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1일 해남읍 해남터널앞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공적비 제막식에서 김 전 부의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박철환 해남군수 등이 비문을 살펴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공적비 제막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봉호 (80) 전 국회부의장(민주당 해남·진도)의 공적비 제막식이 지난 1일 해남군 해남터널앞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제막식은 공적비 건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김대용 목사·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장 보선스님·정창호 재중국 한인회부회장·동북3성(요령·흑룡·길림성) 연합회장, 박흥석 광주상공회소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현안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장 보선스님·정창호 재중국 한인회부회장·동북3성(요령·흑룡·길림성) 연합회장, 박흥석 광주상공회소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한국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